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 의 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4. 27.(수) 10:0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8차,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2-20-08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주)삼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주)삼라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삼라는 (주)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액출자자이며, 자산 규모 10조가 넘는 SM 대기업집단에 해당됩니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6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 사항입니다. 피심인은 2021년 7월 7일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주)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고, 대기업 지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중견기업 상태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10조원이 넘는 상황이므로 시정명령 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이 현재까지 적정한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과 유사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번 시정명령 기한까지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울산방송 문제가 작년에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던 광주방송과 같이 그때 지적됐던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호반건설은 문제가 지적되니까 광주방송 지분을 팔고 나갔고 울산방송은 주식 처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만약 계속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상 주식 소유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두 차례 또는 세 차례까지 시정 명령을 내린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울산방송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출발해서 다른 계열사가 커지는 바람에 10조 이상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송국은 경영이 안 되니까 주식을 내놓아도 누가 사갈 사람은 없고, 이것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울산방송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일각에서는 또 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없다, 있다고 이야기하기 그렇고, 어쨌든 좀 더 노력한다면 매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

○ 김효재 상임위원

- 시정명령이 내려간 지가 제법 됐는데 지금 와서 울산방송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방송은 노력했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사업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지요. 사업자가 노력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관리감독권은 방통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 질문은 끝내 못 팔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는데….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문제가 10조 제한에 걸려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2009년도에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3조원이었던 대기업 규모를 10조로 완화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경제규모가 2020년도 경제규모에 비하면 한국 경제가 거의 2배 이상 커졌는데 지금 지상파방송이든 종편이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정 규모를 키워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에서 재벌에게 방송을 주자는 이야기나는 반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모를 늘려 주어야 하는 고민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양정숙 의원의 국회 제출 법안도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작년 12월에 방송협회에서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계시지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양정숙 의원 법안 제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견도 양자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규모의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울산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알기로 SBS도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10조 이상 대기업집단에 지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SBS 역시 의결권의 제한,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3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지분을 처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결권이 10%로 제한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로 제한될 경우 2대주주가 최대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SBS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자회사 미디어렙의 2대 주주가 일본 광고대행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지상파 방송 광고대행업체의 최대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일본 광고회사가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회의 요구가 있고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다면 저희 방통위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에 관한 나름대로 의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정책적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의 변화라든지 경제규모의 변화, 또 한 가지 법의 취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 중이고, 지난번에 방통위가 주관하고 후원해서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어제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다음 정부의 ICT에 관한 정책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아마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똑같은 논리 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도 이 문제에 관해 언제까지 계속 논의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을 의안으로 만들어서 의결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사무처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질질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주)삼라에 대한 처분은 현행법에 따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가 지금 취하겠다는 그 행위에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처가 법을 어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가 시장에서 엇박자를 내거나 모순의 형태를 보인다면 행정청은 그 법을 재검토하거나 뭔가 사업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소유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그동안 쪽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송협회의 의견은 방송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 입장을 반영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방송언론 종사자, 미디어 종사자들의 경우는 미디어와 산업의 관련성을 놓고 특정 언론사에 또는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미디어 영역과 산업에 대한 영역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에 걸쳐 미디어와 산업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이전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수렴해서 시행령이든 고시든 법 개정에 대해서 그에 따른 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부 인수위에서 제출된 다양한 미디어 정책 중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논의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제한에 대한 것은 협행법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 충분히 숙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울산방송이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했고, 의견서에서는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것은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은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울산방송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울산방송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고 문제해소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저는 그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울산방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또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M 기업집단 전체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초과했고, 대기업 지정상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유사 문제가 이미 타 기업에서도 발생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차제에 본 위원회에서 대기업 기준 10조원의 타당성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 해결방안은 없는지 이미 검토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하니까 신중한 것은 좋지만 검토안에 대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검토가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앞에 정책적인 사안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간 M&A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하고 이런 문제들은 사업자들 또한 시장 현장에서 보안이나 대외비가 굉장히 중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지상파, 민방들이 계속 많이 사고팔았는데 그럴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설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우리가 실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진하니까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자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제는 입법 당시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 당시 입법자 가운데 1명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 기준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또 낡은 규제라는 생각을 그 당시 입법자였던 저는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가 협준하기에 위원회 (주)삼라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유사 처분 사례와 피심인의 매각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사무처의 추가 시정명령(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잦은 지분 매각 등으로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경쟁력 저하에 악순환이 우려가 됩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해당사자 또는 각 영역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의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토, 검토한다고 하기에는 마치 우리가 이 일을 억지로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그런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뭔가 조치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삼라 문제와 호반건설 문제가 나왔을 때가 벌써 1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1년, 2년 동안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무능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미루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부처로서 또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를 제공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 안건에 대해서 관련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문화방송의 UHD TV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 (2022-20-08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문화방송의 UHD TV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문화방송의 UHD TV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

입니다. ‘2019년 재허가 받은 MBC UHD TV 사업계획 중 <UHD 콘텐츠 투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한다’입니다. 상세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MBC의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내용 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재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MBC는 ’19년 UHD 재허가 신청 시 향후 5년간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0년~’24년까지 총 7,959억원 투자계획을 제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9년 12월 이와 관련해서 재허가 시 “허가신청서의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으며, 이는 지상파 3사 공통조건이었습니다. 위원회는 ’20년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MBC가 ’20년 계획대비 236억원을 미이행하여 ’21년 12월에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C의 변경 신청사항입니다. MBC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MBC 드라마제작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UHD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가능한 변경 투자계획을 승인 신청하게 되었으며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타사 대비 부족하지 않도록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C의 변경 신청사항입니다. 첫째, ’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UHD 콘텐츠 투자 계획 중 ’22년~’24년까지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2년 668억, ’23년 466억, ’24년 524억, 합계 1,659억원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둘째, ’21년 미이행한 446억을 ’23년과 ’24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변경금액 관련 사항입니다. 변경계획은 기존 계획대비 65%에서 70%로 ’21년 실제 집행비율인 67.9%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 UHD 콘텐츠 투자실적입니다. ’17년~’21년까지 지상파 3사 실적은 MBC가 4,337억으로 타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콘텐츠 투자실적입니다. ’17년~’20년까지 전체 제작비 투자실적은 MBC가 2조 1,377억원으로 타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거나 유사한 수준입니다. ’19년 재허가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9년 당시 재허가 계획을 ’16년 허가 당시의 제출계획과 비교한 결과, MBC의 증가율은 MBC가 177.9%로 타사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 MBC의 ’22년~’24년까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비교한 결과, MBC가 3,466억원으로 타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HD 편성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UHD 편성실적은 정부에서 정한 최소 편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도 ’22년 22.8%, ’23년 25.1%, ’24년 35.1%로 모두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방안입니다. MBC 변경신청 사항에 대한 기본처리 방향은 ’22년 이후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와 ’20년과 ’21년 미이행에 대한 검토는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UHD 콘텐츠 투자 변경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UHD 콘텐츠 투자실적은 ’19년 재허가 계획대비 MBC가 미흡하지만 타사 투자실적과 비교할 때 약간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변경 신청한 투자계획은 3,466억원으로 타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UHD 편성계획 또한 투자계획 변경 시에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제출하였으며, 변경 신청 금액 또한 ’21년 실적 비율 수준으로 실제 이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UHD 정책방안 준수와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 가능성,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제출한 콘텐츠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변경 신청한 사항은 향후 재허가 심사 시 심사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0년과 ’21년 미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이행한 금액은 소급해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21년 미이행한 금액은 '21년 재허가 이행 실적 점검 시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20년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을 해서 별도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MBC가 재허가 조건 중 UHD 콘텐츠 투자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MBC는 향후 3년간 당초 5,126억원에서 1,660억원 32.4%가 줄어든 3,46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MBC는 1,000억원대의 적자, 시청 패턴 변화 등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당초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수익성, 성장 가능성, 자금조달 능력,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해당 계획은 정부가 방송사의 목표액수를 설정해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방송사가 정부에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같이 공적인 약속이라면 의사결정에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19년 재허가 당시에도 지상파방송의 경영위기, OTT, 미디어 활성화 등 투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들이었습니다. 2020년, 2021년도의 MBC 콘텐츠 투자실적은 이미 목표치 달성을 실패했고, 또한 향후 2022년~2025년에도 실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무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지금에 와서 외부 환경이 변했으니 계획 변경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MBC 측의 책임이 크며 몇 가지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선 '20년과 '21년도 투자실적 관련입니다. '20년, '21년 계획대비 투자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MBC는 반드시 빠른 기간 내에 별충해야 합니다. 향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콘텐츠 투자 관련 부분입니다. 작년 MBC의 광고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예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콘텐츠 투자 여건이 나아진 것입니다. 금번 계획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MBC는 향후 투자계획서를 넘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무처 원안인 계획 변경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국내 방송 경쟁 상황 악화에도 MBC는 작년 한해 흑자를 내는 경영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최근 더욱 격해지고 있는 글로벌 OTT와의 콘텐츠 경쟁 상황과 또 타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투자 규모와 MBC의 UHD 편성비율 준수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MBC의 UHD TV 재허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문화방송이 2016년 허가 당시보다 2019년 제출한 투자계획 증가비율이 타 방송사보다 높아서 변경 요청한 2022년~2024년 투자계획도 KBS, SBS 투자계획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사무처(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재허가 심사 시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문화방송은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MBC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경영 문제로 당연히 지켜야 할 공적 역할,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관련 정책방안, 투자 이행 가능성,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MBC는 오늘 약속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1분 폐회 】